

제391회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9월7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3)
4.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0881)
5.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137)
6.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262)
7.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022)
8.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의안번호 2111733)
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3)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80)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0)
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0)
13.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3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 ... 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3
 4.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0881) 3
 5.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75인 발의)(의안번호 2112137) 4

6.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262) 4	
7.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68인 발의)(의안번호 2112022) 4	
8.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3인 발의)(의안번호 2111733) 4	
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3) 4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4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0) 4	
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 4	
13. 현안보고 11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사·보임, 소위원회 위원 개선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일 분야에 탁월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모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앞으로의 갈등은 아마 세계사에 변곡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 운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

두 번째, 우리 국력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세 번째로는 기후 위기나 백신 문제 등 전 세계적 이슈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나라의 외교 역량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천하의 문제는 천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 건국의 아버지들

은 당시에 많은 옛날의 서적들과 지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로마가 1000년을 갔는가 연구를 해서 상원이라는 양원제도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천하의 지혜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께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위원님들이 계시는 평소의 지식, 소신, 경륜이 함께 배우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간사님과 이재정 간사님, 두 분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하고 저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김태년 위원님과 안민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남북경협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제가 이름에 따라서 타고난 운명으로 다시 외통위로 복귀했습니다. 한 3년 만입니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잘 되려면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체제가 중요하고 그 한반도 평화 체제의 출발은 71년 된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 된 정전 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님을 하시다가 오신 유기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쟁쟁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외통위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3선 하는 동안 사실은 그동안 교육위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위 외에 첫 번째로 외통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석사·박사 학위는 북한대학원대학에서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을 했던 경력도 있어서 외통위가 그렇게 크게 낯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막내로 합류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저도 열심히 외통위의 일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통 위원님 중에 정진석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이 되셨는데 모두 박수로 한번……

(박수)

소위원회 위원 변동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보임으로 소위원회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유기홍 위원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보임하시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셨습니다.

회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님께서 갑작스러운 일신상의 이유로 최종건 제1차관을 대리 참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간사 간의 협의로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요. 회의장 내에는 적정 인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이광재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결의안인 의사일정 제5항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상정하기 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3)

4.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0881)

5.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의원 등 75인 발의)(의안번호 2112137)

6.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48인 발의)(의안번호 2112262)

7.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 (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68인 발의)(의안번호 2112022)

8.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배현진 의원 등 103인 발의)(의안번호 2111733)

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3)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0)

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 등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배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의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수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 서린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우리 국민의 아픔이 서린 군함도의 진상 규명 및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유네스코에 보냈고, 유네스코는 답신을 통해서 제44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겠다는 화답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후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인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함도 역사 왜곡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을 통해서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서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건 외교부차관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8월 31일 본회의에서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642억 원으로 예산액 2837억 원보다 2195억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액의 경우 당초 예산액에 추경 증감액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2조 4636억 원이고 이 중 2조 34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 분담금 4756억 원,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8693억 원, 재외공관 운영비 5883억 원 등 3개 부문이 약 8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외교, 다자관계 협력, 재외동포 보호, 경제외교 활동 등을 전개하여 40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용역계약 등이 미완료됨에 따라 이월액 24억 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118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1277억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572억 원을 지출하고 170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무 결산 내역 등 2020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여건은 교착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도 답보를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6월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단절되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를 분야별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대화 분야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전략·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절차로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방면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분권과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해북부선 복원 결정 등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DMZ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과 이산가족 등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제2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2020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방식의 교류를 준비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위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북한의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정보를 북한 연구자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는 등 대국민 북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 도입하여 통일교육주간을 온라인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비대면 원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2030세대 청년 과정을 신규 운영하는 등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취업교육·창업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취약계층의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그리고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응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60억 원으로 일반 예산 206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060억 원에서 92%인 1895억 원을 집행하였고 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에 따라서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68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 원, 남북회담 미개최로 인한 12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사업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4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1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1500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7941억 원을 조성하여서 북

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기반 지원 등 사업비에 442억 원,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056억 원을 사용하였고 여유자금으로 141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인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민주통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일 창설 40주년을 맞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가 출범했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평화통일의 사명을 국민과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적 평화통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6쪽의 세입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통장 이자 등으로 총 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28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0.4%인 296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여론 조성활동에 총 213억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내외 지역회의, 운영·상임 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6개 사업에 3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기관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의 사업에 26억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9개의 사업에 153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83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 및 전용,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은 해외지역회의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조정, 국내지역회의 임차료 부족분 충당 등 총 11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인 31억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기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지동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

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추정 대상 사업 선정 시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성질상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로 인해 예산 집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외교부는 추경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고 연말에 다른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이용하여 유엔 PKO 예산 분담금을 청구 기일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외교부가 사업 예비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한스타일 공간연출은 재외공관을 전통소재를 활용하여 한스타일로 연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예산 3억 원 중 600만 원이 실집행되었으며 사업 기간이 2021년 9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외교부가 전라북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라북도는 이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어 집행 방식이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외교부 재외공관 개선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부가 직접 위탁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도에 5개 공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도에 2020년도 예산으로 추가 2개 공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의 경우 법무부의 전자사증 시행이 2020년 7월 1일이어서 외교부는 사증 발급용 스티커를 예년 구매량의 50% 수준인 150만 장을 구매하였습니다.

2020년 실제 사증 발급량과 2019년도 말 보유 사증 발급용 스티커를 고려하면 2020년 구매한 사증 발급용 스티커가 대부분 폐기되어야 할 상황이었어서 당초의 사증 발급용 스티커의 구매가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증 발급용 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시스템 도입을 법무부에서 이미 2018년 11월에 외교부에 알린 점과 2020년 1월에 법무부 공지가 다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증 발급용 스티커 구매 시기, 횟수, 구매량 판단에 보다 신중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후이더라도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외교부는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해 왔으며 2020년에도 연말에 집중된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액 이월 등이 있었으므로 동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명세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감사원 송부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의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대륙별 비중점 국가그룹 사업입니다.

비중점 국가그룹 사업의 경우 지난 2020년도 제2차 추경 당시 사업비 불용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추경 및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자 대륙별 비중점 국가 사업 내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 세부 사업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사업의 감액 전용을 계획한 지 5일 후에 동 사업 증액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 추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

습니다.

아울러 비중점 국가 사업에서 기 추진된 사업 예산 소요가 면밀하게 고려되지 못한 채로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던 결과, 동 사업 예산이 추후에 증액되는 등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총괄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각 부서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기계약직 등의 보조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타운영비로 편성·집행해 오고 있는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무기계약직의 경우 재단의 조직 운영 및 평가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단은 향후 보조인력의 성격에 맞게 상용임금 또는 일용임금 비목으로 편성·집행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보다 안정적 급여 지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금 한국문화 해외확산 사업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한국문화 해외확산의 2020년도 계획액 중 13억 8200만 원을 재외공관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고 이 중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경상이전 비목 등으로 편성되어 재외공관에 송금되었으며 각 재외공관은 해당 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 외에 별도 계좌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국가기관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별도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재단이 재외공관에 사업비를 송금하는 사업 방식은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은 향후 재외공관에 지원금을 송금하는 집행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동 사업을 재외공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외교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외교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 이외에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등에 대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등을 보호·지원하는 한편 국제교류기금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과도한 적립금 보유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재단 사업 범위에 재외국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추가하는 것은 동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젠도를 일본 정부가 압수하고 적절하게 처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을미사변에 대한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본 정부에 히젠도의 압수를 포함한 적절한 처분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2건은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과 그 가족의 안전 보호 및 대한민국 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탈레반의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탈레반이 공연한 인간의 존엄성 및 여성 인권 보장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인권 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탈레반의 만행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시의성이 높으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과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2건은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의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노역 피해자가 한국인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광재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과태료 세입과 관련하여 매년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수납 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문화행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특집 다큐를 제작하고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진행한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보았습니다.

3번,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이 있어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직접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간 중복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남북하나재단이 출연금 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 간의 동일한 내용을 사실상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워크숍이 무료 회의장이 아니라 유료 회의장에서 다수 개최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부족한 임차료 충당을 위한 세목 조정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첫 번째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임원 연임제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인도협력국 구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미집행 또는 중단 시 사업관리비 반환 및 이자의 귀속·반환에 관한 내용을 업무 약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연간 운용 수익률이 1.33%로 2018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여론 수렴·분석과 관련하여 통일 문제 여론조사에 있어 자문위원의 응답률이

30%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번, 자문회의 운영사업 중 국내·해외 지역회의와 관련하여 예년과 달리 호텔에서 국내 지역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임차료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및 통일자료 지원과 관련하여 온라인 자료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 4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북자,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남북자 등이 고령화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실제 교육 지원 대상자가 크지 않고 대상 학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 실시 대상에 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교원의 교육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학교 행정직원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교육 진흥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실시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수준, 효과적인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광재 최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 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이광재 이상으로 결산 등의 상정 절차를 마치고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건 외교부차관께서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어차피 서류가 있으니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북 관계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각급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 관여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그리고 차관 통화, 북핵수석대표 간 연쇄 협의 등을 통해 북핵 문제가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선결적 과제라는 한미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외교적 관여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일·러·EU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입니다.

배포 자료 2페이지입니다.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전 정권 및 외국 기관 협력자에 대한 사면과 이슬람 율법하 여성 인권 존중 및 언론활동 보장 그리고 내각 구성 방침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각지에서 탈레반의 폭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난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및 철군을 완료한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가도 대피 작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유엔은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여 아프

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급변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 TF를 구성하였고 아프간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8월 15일 탈레반의 카불 장악 이후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과 우리 공관원 전원을 카타르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1명을 미국 등 우방국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정부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아프간 신정부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리스트에 대한 피난처 제공을 불허한다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변화를 주시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최종건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제재·자연재해 등의 위기 대응과 경제·민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와 같은 고강도의 비상방역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VAX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코로나 백신 도입 협의는 가시적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생 관련 식량과 생필품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물가와 환율의 변동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무역액은 코로나 이전 기간에 비해서 15분의 1로 줄어들었고 북·중 무역 감소에 따라

서 곡물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 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올해 농사를 나라 존망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식량 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연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방역을 유지하면서도 물자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중 접경지역에 방역시설을 건설하고 시험 가동한 이런 정황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두세 번의 태풍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 개최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재해 대비, 방역 강화, 농업·경공업 성과 제고 등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남·대미 입장은 아직 표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남·대미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에 아직 응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남북 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습니다.

통신선 정상화와 영상회담 등 남북 간 대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지원해 나가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공공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일·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는 한편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AI·빅데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 조성사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인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핵심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20기 자문회의의 구성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가 지난 9월 1일 출범했습니다.

국내 자문위원은 1만 6100명, 해외 자문위원은 131개국에서 3900명, 총 2만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제20기 자문회의의 구성의 주요 특징은 청년과 여성의 역할과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부의장을 신설하고 여성 간부위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부의장의 신설은 민주평통 40년의 역사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여성 운영위원이 30%를 차지한 것도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조직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 제19기 대비 390명이 증가한 총 2290명을 국민참여공모제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조직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기반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 위촉 국가를 124개국에서 131개국으로 7개국 확대하였으며 해외 지역의 협의회 수는 43개에서 45개로, 지회 수는 36개에서 43개로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0기 출범회의 개최입니다.

국내 출범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10월 중 온·오프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범회의는 9월부터 11월 중에 해외 45개 협의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서 방역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 건의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통해서 적실성 있는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17개 시도 지역 회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평화통일포럼을 통해서 통일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군구 협의회에서도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을 통해서 이러한 담론을 적극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자문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제20기 민주평통회의의 활동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활동과 정책 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 연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외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대입니다.

해외 자문위원의 참여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평화통일포럼, 해외 평화통일강연회, 해외 정기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기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된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김영주 위원님……

○지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재 예, 위원님.

○지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말씀하십시오.

○지성호 위원 외교부차관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외교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감사 및 감찰 방법과 조직에 대한 연구용역 문서 사본인데 이것이 제출 안 되고 있고 다음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한 5개년도 인력관리 수립계획 사본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외교 비밀이라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자료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차수별 외무공무원 징계에 참여한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 수 통계 자료인데 이 세 가지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성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순서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예.

○김영주 위원 제가 현안질의가 있어서 서면질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민주평통 세미나 관련 예산과 강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서면질의…… 다른 현안질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목요일 날 결산 소위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가 서면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외교부차관님, 장관님이 나오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지난 8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서 미국 측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국회의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 운영위에 참석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 포함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해서 그게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제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외교부장관은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몰랐든가 아니면 국회에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기 어려웠든가 이런 것 중인데,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당시 장관님 발언의 풀 텍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주한미군기지 혹은 이송하는 데 있어서……

○김영주 위원 아니요, 저는 난민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었지 각론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지금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

○김영주 위원 국가안보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한 문제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올 정도로 공유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외교부장관이니까 외교 문제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파이프 아이즈(Five Eyes)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은 냉전시대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상호 신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다섯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제일 먼저 거론했고 일본, 인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파이프 아이즈 참여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지금으로서 혹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 검토하지 않은 것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면, 우리 외교부하고 전혀 어떤 교감도 없이 우리나라 정부

의견도 듣지 않고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수권법의 내용은 미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에다, 일종의 지침성 법안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포함하라는 법안은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한국, 일본, 인도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가 돼서 이제 상정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 측 정부하고 전혀 교류 없이 일본……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포함시켜서 한국을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앞에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국방 라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체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지적하셨듯이 미 의회에서 특히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된 내용이므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금도 그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저희 현지 공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잘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이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미 의회가 미 행정부에다 대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미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미국에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당연히 한미 간에 하는 거고요.

○김영주 위원 미국만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미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미국 하원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결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하고도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중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면서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공개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어떤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는 어떠한……

○김영주 위원 아니 제 답변, 그렇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미국 하원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여쭙봤으면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과 외교관계를 통해서 왜 이것을 거론했고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느냐, 저는 외교부에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동안 파이프 아이즈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동맹체.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원래 파이프 아이즈의 기원이 냉전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 가입 5개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중 외교에 한국이 어떠한 것도, 우리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도 건전한 국익을 위한 외교관계, 미국도 외교관계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와전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외교부도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국 의회의 상황이고 이것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물론 그것을 저희가 여러 물밑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이프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미국하고 외교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위원님.

○이태규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39개 주요 공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공관과의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임 공관장의 대외 보안활동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공관에서 이 네트워크 구축비의 목적 외 사용 했다는 의혹과 오집행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니까 외교부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변명할 부분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면 개선책을 찾는 것이 공직자가 국민 앞에 갖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소위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 대신 현황 관련해서 한두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위원님.

○이태규 위원 IAEA의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고서로 인해서 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대한 위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국은 북한한테 효용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IAEA 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추정’, ‘징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서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재가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북한 나름대로의, 소위 여러 시그널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만약에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2018년도에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

나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9·19 평양에서 합의했던 내용들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테면 핵실험장 파기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태규 위원 우리가 사실 액면 그대로 글자 하나에 그렇게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상회담 선언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적에, 저희가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제3항 4호 또 평양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5항 이런 취지로 봤을 적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부분이 재가동됐다면 이것이 정상회담 간의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은 국정감사 때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IAEA 보고서 이전에 ‘재가동 징후가 추정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라는 사실 그쪽 영변 혹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저희가 한미 자산을 통해서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확히 보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가동, 재가동을 저희가 확인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NSC가 별도로 열려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NSC에서는 공개 안전, 비공개 안전이 있습니다만 여러 차원에서 그리고 실무와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북한의 여러 상황들은 안보점검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 이전에 이런 징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지하고 논의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글썽요, 이것을 뭐 굳

이 연결할 수는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북한의 여러 상황들은 정부의 최고 핵심 사안이므로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통일부는 그것이 아니고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주장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글썽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 이전에 통일부는 통일부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그 발표 내용,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한 합의된 결과로 통신선 복원을 이루었다고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규 위원 남북 통신선이 다시 지금 불통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북쪽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다시 두절이 된 겁니다, 복원된 지 2주 만에. 그런데 그때 7월 27일 복원했을 적에 통일부는 ‘남북 정상에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서 우선 통신 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한 취지에 비한다면, 다시 2주 만에 이것을 끊었다면 그때 통일부의 주장이나 판단은 저는 굉장히 틀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우선적 조치로서 연락선 복원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안보적인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통일부가, 통일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행위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판단이 맞느냐 이것을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의 판단도 또 상대에 대한 진정성에 기초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상호 합의 속에서 우선 통신선을 복원한다, 이런 것들이 협의되고 합의되었을 때 그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군사·안보적인 전략이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최종건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요, 어제 IAEA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5일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 만나서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관님께서서는 이 소식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어떤 경로로 파악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엔나에 저희 현지 공관도 있고 현지 공관이 IAEA와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특히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저희의 입장을 IAEA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들, 소위 간부진들의 움직임은 저희들과 소통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알고 계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언제쯤 알고 있었다기보다도……

○**김영호 위원** 외교부가.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외교부가 언제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짧게는 한 3, 4일 전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 전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IAEA의 안전성 검증 작업에 우리가 원래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지금 이것을 안전성

검증의 본 사업, 본 검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우리 국적, 우리 한국인 전문가분께서 참여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정되어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대표단 방일 목적이 이거거든요. 현장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방류가 진행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안전성 검증에 들어가기도 전에 방류를 기정사실로 두고 오염수 방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해저터널을 통해 1km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바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본 측이, 또 도쿄전력이 발표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둥니다만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은 동의 안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양자, 물론 다자적인 문제이고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 수역 국가로서의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만 일본 측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여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한일 관계의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로 하는 조치는 주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초치 조치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소통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아태국장이 그리고 기후환경국장이 직접 일본과 유무선

으로 통화하기도 하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일본의 설득은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국제사회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IAEA가 최근 연변 원자로 재가동이 된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요. IAEA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IAEA의 보고서가 여러, 소위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그들의 정보 역량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것은 면밀히 봐야 할 사안입니다.

○**김영호 위원**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던 시점이잖아요. 7월 연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도 정보 공유를 했었던 거잖아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줄곧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해 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미국 측 인사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단 한미가 북한에 보내는 여러 시그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대화로 나와라 하는 쿼른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요. 그럼과 동시에 역시 한미 간의 여러 자산을 통해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간에 그리고 북한·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 쟁점,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조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인 지원을 거론하면서요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회신

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봄 접촉 사실을 재차 거론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가 아는 바로는 미 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채널이고 언제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파악을 하고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김영호 위원** 이인영 장관님께도 한 가지 여쭙 볼게요.

지금 북한과의 통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불응하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영호 위원** 북·미 협상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나 미국의 인도적인 지원에도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제기구나 NGO의 지원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마찬가지로……

○**김영호 위원** 죄송하지만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소극적 판단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 대외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경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라든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했고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액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주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구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최종적으로 교추협을 통해서 의결하면서 진행돼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교추협이 있기 전까지는 포괄적으로 엠바고 조치를 취하면서 해 왔었기 때문에 교추협이 있을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 외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미래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주 초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오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방문 기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또 내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문제 이것 논의된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간다라는 전제를 세워 놓고 본다면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 대한민국 방문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한중 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호 위원 제 물음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 정상들의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될 차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시진핑 주석이 무조건 한국에 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대통령님의 북경올림픽 방문, 참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역시 시진핑 주석이……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동계올림픽에 와 달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으로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동계올림픽 전에 와야 된다 이런 안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아이디어, 그 말씀은 저희로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요.

○태영호 위원 아직까지 이런 안도…… 아니, 보도가 한 주일 전부터 나오는데 외교부에서 아직도 이런 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여러 안이 있습니다. 두 분 정상님의 교차 방문입니다만 사실 위원님, 저희로서 우선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태영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순서, 우리가 시퀀스를 정할 때 시진핑 주석이 오는 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있다 이런 구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 아시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우리 주권 사항인 안보 문제에 간섭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지난 4월 달에 정의용 외교장관님보고 사드 이것 철수해야 된다 항의한 사실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한중 간에는 이런 문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합니다.

○태영호 위원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우리가 이거 하니까 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공개된 발언 본 적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상하게도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한 간섭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는가 하면 아시겠지

만 지금 여당에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시기에 사드 철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 것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보도에 다 나오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아니, 어떤 특정 주자의 발언을 제가 다 폴로업은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 그래서 만약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안보주권 사항인 사드 문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외교부에서 이것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는 기존 입장을 계속 이야기할 뿐입니다.

○태영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존 입장.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위 문 닫고 하는 비공개회의에서 양국은 혹은 어떤 나라든 자신의 핵심 이익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사드는 동맹 현안이고 우리 안보 이익에 중요한 자산이니만큼 또 북한을 바라보는 자산이고, 저희는 계속 우리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태영호 위원 질의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프간 철수 이후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하원이 이것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유지조항 삭제하는 이런 국방수권법 개정안도 내놔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에서 미국 외교 안보의 전략을 대중국 견제로 돌렸다 이런 보도 다 들으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보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미중 갈등에서 우리 한국이 점점 최전선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고 내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이런 구도로 정상들이, 한중 양국 정상의 밀착 행보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한미동맹은 소원해지고 한중 밀착 행보는 강화돼서 이런 임기 말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 우려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과민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든 소위 서울이 북경과 여러 관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한국과 중국은 이웃국가로 그리고 동맹……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미국이 이렇게 한중 정상 외교가 밀착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이웃국가이고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각급에서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 이후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결국 한국도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프간 사태 이후에 한중 간에, 특히 정상 간에 이러한 밀착 행보를 보이는 시그널을 미국에 주면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 저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간에는 시그널을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면 혹은 여러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의도와 저희 계획 서로 점검하고요, 그만큼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정상 교류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무조건 상호주의 원칙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중국이 오라고 해서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2월에 간다, 이런 아주 기울어진 그런 외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협 위원 김정협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IAEA에서 북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가동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중단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경협 위원 혹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북이?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런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3년 전쯤에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하거나 공식적인 중단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글썽요, 가동한다 이런 것들을 선언한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경협 위원 2007년에 핵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10·4 공동성명 이후에, 그리고 북이 2009년에 핵 개발 재개 선언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했었지요, 이미.

○김경협 위원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거나 이것인데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남북간에 또는 북미 간에 이 영변 핵시설을 중단한다 또는 폐쇄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김경협 위원 공식적으로 없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경협 위원 2019년도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에서 이 문제가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제재 완화 부분의 달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다가 실제로 노딜로 끝나면서 여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렇지요.

○김경협 위원 그렇다면 어떤 얘기나 하면 핵시

설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 단계마다 순서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한 단계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 중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끝나면 잠시 멈추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핵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이해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재개와 재가동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최종건 차관께……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위원님.

○김경협 위원 금년이 6·25 한국전쟁 발발한 지 71년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째입니다.

불안정한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요.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지만 문제는 이게 사실 국가신용도 분단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이게 외평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7대 종교단체, 7대 중단을 비롯한 460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종전선언 평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여기에 지금 국제평화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고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미 연방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에 의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평화법이 발의됐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김경협 위원 몇 명이 서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았기로서는 7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

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닙니다. 70여 명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건 1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최근에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18명이 됐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70명 얘기는 이전 지난번 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얘기일 겁니다. 그 결의안 말고 이번 5월에 발의된 한미 정상회담 바로 하루 전날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에 대해서 1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영국 하원에서 지지 결의안이 발의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냥 차관님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것 이렇게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개국쯤 됩니까?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지지 국가.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미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 일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종전선언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경협 위원** 종전선언 지지 국가 명단을,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걸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유럽의회 한반도위원회에서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한반도위원회면 유럽의회에서 굉장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 이게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들어 본 적도 없

고 한국의 정부로부터, 외교부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외교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외교부가 해 왔던 시도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차관님 잘 챙겨 주시고요.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북한 핵 문제 해결, 비핵화 이 문제가 우리 대북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IAEA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IAEA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서 대단히 우려하는,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 뭐 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대화를, 답변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장관님은 IAEA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IAEA 발표는 그 자체로 저희는 IAEA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존중하면서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니까 정

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핵시설 재가동은 아까 서두에 장관도 동의하신 대로 우리의 대북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실시간 재가동 상황정황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지난달 27일에 남북 통신선 복구 이 문제를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이러한 남북 통신선 복구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뭐 평화의 청신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이 핵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대답했습니다만 양 정상이가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친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된 그런 우선적 조치로써 연락선 복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를 저희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도 저희들은 또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주시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정치·안보적인 문제, 국민의 생명, 이 사활이 걸린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북한의 핵인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통신선 복구, 정말로 우리가 대단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그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IAEA가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위원님, 역대 다른 어떤 정부 속에서도 한번 폴로업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또 미국과 이렇게 협의되는 과정들을 통

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늘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IAEA가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또 주요 외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를 정부가 숨기니까, 발표를 안 해주니까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을 뻔했다, 이 사실에 경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통일부에서 통신선 복원 이 발표 후에 바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심각한 북한 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거는 말을 안 하고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 문제도 계속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까지 하시는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카불공항에서 그 국민들이 그 사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간 카불공항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리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면 저나 위원님이나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신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들을 우선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우선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권 속에서 핵과 관련해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이 진전됐던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홍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 먼저 외교부 차관님께 이번에 아프간 난민들 탈출 시킨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분들,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 명칭 도입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도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셨는지 또 법무부와 외교부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가 꾸려졌고요, TF 안에서 논의했던 게 여럿 있는데 이것이 결국 통합 논의체라고 하는 NSC에서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법무부차관 그리고 후에 상임위 때 장관 오셔서 외교·안보 장관들과 논의한 것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외교부의 의견이 어땠고 법무부의 의견이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번에 그분들을 탈출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지만 이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도입한 것 그 부분은 우리가 난민 문제에 있어서 폐쇄적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에게 F2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한테 부여하는 체류자격도 같은 F2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난민 심사 과정만 생략될 뿐이지 난민 지위 인정받은 외국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작전을 펼쳐서 구조해야 될 만큼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정당당당하게 난민으로 인정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편법을 써서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가급적이면 난민의 보호와 수용을 하지 않고 싶다는 그런 뜻

을 비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없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테면 저희가 난민에 단혀 있다 이거는 여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지만요.

특히 이 391명의 저희가 모신 이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조력을 제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전하게 모셔 온 것이지요. 초반부터 어느 나라도 아프간 국민들을 다 데려오지 않았습시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에 여러 오퍼레이션을 도와준 분들을 선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작고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으로라도 이 사람들만 데려올 수 없으니 자녀, 부모 다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셔 온 것.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아프간에서 도와준 그분들을 먼저 모셔 온 겁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 뜻이라면 좋은데요, 우리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 그것에 근거해서 2012년에 난민법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김홍걸 위원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의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텐데……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특별 기여자 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와 협력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아프간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사람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다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국적·인종·종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박해받는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차별없이 보호한다는 게 난민법 취지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문을 열어 두고 분명히 우리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했다.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하는 제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정의용 장관님 나오셨을 때도 ‘미국이 바이트 정권만의 대북 정책이 따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달 전에 하셨는데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권 시작될 때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몇 년째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자, 현상 유지만 하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도 바이든 정부를 ‘오바마 3기보다는 클린턴 3기 이런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 시절도 아닌 바이든 정부다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여전히 주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프간 사태가 미국으로서는 꽤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성 김 대표가 와서 여전히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주었던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만나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이고 또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홍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재** 예, 1분……

○**김홍걸 위원** 아까 영변 문제는 이번에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북한이 평소와는 달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없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김홍걸 위원**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국내 사정,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외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다든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시위 대신 영변이 재가동될 수도 있다 하는 신호를 줌으로써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겠다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어쨌든 다시 협상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놓을 카드가 당장은 통 크게 북한에 선제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량 지원을 대규모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변을 재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지 않고 좀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식량과 관련해서 그 카드로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대응 전략 이전에 우리 정부는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 민생 협력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의 규모 있는 식량과 비료 이런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재외국민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재외국민이요?

○**윤건영 위원** 예, 한 27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대한민국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윤건영 위원** 270만 정도의 재외국민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재외국민의 백신 접종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즉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이고요. 대부분 외국인들 구별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국교를 수교하고 있는 나라 191개국 중에서 162개국은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중에 29개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윤건영 위원 29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재외국민들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대충…… 우리가 표현하기에 험지 국가들입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한 2만 5000명 정도의 우리 재외국민들이 29개국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외국인을 차별없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아직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최근에 저희 의원실로 상당히 많은 재외국민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어렵지요. 지금 우리 국내의 백신 수급 상황이라든지 접종 계획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백신 제약사와의 계약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찌됐든 2만 5000명이나 되는 재외국민들이 백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윤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무부처로서 질병청이라든지 관계부처에 회의를 소집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회의 소집이라든지 관련된 테이블을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이미 질병청과 재외동포의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타임 테이블을 짜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님니다만 프랑

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별받는, 백신 접종에 차별받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본국에서 백신을 수송해서라도 접종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물론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수용하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차별하게 그 준비를 지금은 해 들어갈 때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조금 적극적인 행동계획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차관님께서 잘 좀 챙겨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외교부 사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내 방송 매체에 의하면 아프간 탈레반 대변인과 인터뷰 기사가 나옵니다. 아주 성급한 이야기입니다만 탈레반 측에서는 대사관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경협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와 탈레반의 과거의 여러 관계 그리고 아프간 정부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한 발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대외적으로나 우리 내부에서도 현재 지금 탈레반 상황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공항의 이착륙도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상황 주시하겠습니다만 아프간 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어떠한 대내 정책, 대외 정책 특히 여러 인권 관련된 정책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련된 정책이 좀 윤곽이 드러나면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우리와 협의·협력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공관을 못 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윤건영 위원 그 문제 잘 말씀하셨고 잘 판단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과거 샘물 교회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윤건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등록법인 사무검사 문제였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되다가 작년 12월, 올 초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통일부에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전체 대상 109군데 중에 도저히 이것은 사무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26군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안 되고 3년 동안 회의 자체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은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무검사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인권 탄압이다’ 여러 가지 극악스러운 표현을 써 가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사무검사는 잘하는 곳은 잘한 대로 더 격려하고 못한 곳은 못한 대로 지적을 해서 더 육성하자는 차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검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작년, 1년 전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수치는 다릅니다.

지금 109개 중에서 58개를 완료했고요. 협의 중인 곳이 17군데 그리고 검사 불가한 곳이 34개인데 검사 불가가 미운영 상태이거나 해산 예정 등등의 이런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7군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마저 마무리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우선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후속 조치나 정리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살펴보고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잘못된 것을 적발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제가 취임하기 전이었습니다만 취임한 이후에는 법인 본연의 목적, 그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복돋우는 이런 차원에서도 사무검사 과정에서 그런 주안점을 두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마지막 마무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윤건영 위원 장관님 말씀 맞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곳이 아예 11군데,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데가 15군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26군데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돈이 되어서 잘하는 데가 육박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부장관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중국 영화인데요. 제목이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중국 영화 포스터예요. 이게 9월 16일 날 대개봉한다고 돼 있네요. 이 영화 소식 좀 들어 보셨어요, 뉴스에서?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저도 오늘 아침 뉴스 검색하면서 봤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게 어떤 영화냐 하면 6·25 전쟁 때 강원도 김화군, 화천군 일대에서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아군, 우리 국군 1701명이 전사하고 7548명이 부상하고 국군 포로 실종자가 4136명, 9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우리 아군이 참패한 전투입니다.

한국전 참패를 그린 중국 영웅담의 영화가 수입이 돼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돼서 배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6일부터 개봉이 되는데 저는 이런 영화를 왜 수입하는지, 중공군을 영웅시하고 한국군이 참패하는 이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하는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전형적인 중국 선전용 영화거든요. 이것 수수방관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아니, 역으로 우리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이게 개봉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 장관님께서 영상물등급위원회든 관련 정부 기관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요, 관련 부처 장관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답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 관련 부처, 아마 문제 부일 것 같은데요. 그쪽의 장관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상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장관님 그 판단도 온당한 것 같지가 않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글썽요, 역지사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6·25 때 이긴 것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화돼 가지고 북경에서 상영되면 어떨까 그런……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런 게 상영이 안 되지요. 우리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그런 건데 그게 북경에서 상영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가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판단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 판단에?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이게 북한하고도 관련돼 있고 6·25 전쟁하고도 관련돼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에 동의하시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아니,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위원님 의견에, 또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정진석 위원 아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본위원의 이런 지적과 의견에 흔쾌하게 동의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인영 장관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아니, 저라면 분명히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입한 사람의 무슨 권리나 법적인 권한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런 것 묻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우리 국민이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저는 믿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사족을 달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차관, 파이프 아이즈 확대 필요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굿 뉴스입니까, 배드 뉴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단은 미 의회가 고려해 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진석 위원 우리에게, 우리의 국익에……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대한민국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굿 뉴스라고 듣고 계신다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다만 이것을 결정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굿 뉴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정부라……

○정진석 위원 이것이 채택될지 말지는 나중 문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나중의 문제지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국이 파이프 아이즈에 가입하려면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과 기존 회원국들이 한국의 가입에 합의를 하고 그야말로 초청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둘째는 한국 정부가 그 초청을 수락해야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렇지요.

○정진석 위원 우리 정부가 이것 수락할 수 있

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리기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비테이션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진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두 번째로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저희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파이프 아이즈의 성격이 꼭 다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100% 도움이 될까,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일 겁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첫째는 굿 뉴스라는 답과 지금의 답변은 상치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것은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위원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헛갈리고 있던 말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기분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으면 이것을 수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것을 수락을 할 수 있고 정말 파이프 아이즈의 참여국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유장하게 안 해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결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는 고려를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 스탠스는 뭐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는 상당히 우리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나서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석 위원 1분만요.

어저께 영국 대사관에서 파이프 아이즈 대사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들이 자기네들 플랫폼 가지고 여러 회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이 서울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여기서 정보동맹 가입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진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점심시간 없이 그대로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차세대 전자여권 문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 좀 보여 주시지요, 첫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토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엄청난 인종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 꼭 98년 전 9월 7일 그 시간에도 조선인들이 죽창에 찔려서 학살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는 것은 주로 죽창을 이용했는데요. 민병대들의 일탈이라고 나중에 정리해서 재판에서 아주 가벼운 형만 받았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석방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창으로 찌르는 화면 그리고 그 밑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일본군의 개입이 증거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전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당시에 몇 명 정도가 학살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홍 위원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신문을 통해서 6661명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했고 또 이례적으로 당시 독일 대사관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2만 3000명이 학살당했다는 독일 측의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연 몇 명이 학살당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일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기 지역에서 학살된 역사를 복원하고 그리고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는 운동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일본 시민단체가 암매장된 유골들을 발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규탄 성명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도쿄 도지사가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1일 날이 되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극우적 성향을 가진 도쿄 도지사가 올해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 뉴스가 될 정도인데 우리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규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 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103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안타깝게 통과되지 않았습니 다.

이번에도 법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혹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당장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에 생산된 혹은 자행된 여러 만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기억을 재생시키고 또 공고화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담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저희들이 항의하고 있고 외교적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의도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망각시키려고 하는 사안들,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관서 대지진일 텐데요.

간토 대지진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도 명확한 입장을 하고 현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감사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있으니까 외교부에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리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통일부장관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9월 1일, 며칠 전이지요. 북한이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규탄 담화문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하고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로 나왔습니다.

○유기홍 위원 통일부에서도…… 지금 위안부 문제하고도 다릅니다. 피폭자 문제하고도 다릅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하고도 다릅니다.

다른 사안들과 다른 식민 본국에서 일어난,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성격의 이런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남북이 같이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북이 이 문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전례가 있지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남북이 같이 행동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우선 민간 전문가, 학술, 역사 고증 이런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면서 이것이 국가 간의 문제 이전에 조금 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 위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고요.

외교부차관님,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2차 미라클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사실 그쪽에서의 그라운드 상황이 허락이 되면 저희는 기여자들을 못 모시고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우리 국비장학생 14명 중에 2명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프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전남대에 오기로 되어 있던 여학생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 주세요’라는 동영상 찍어 보낸 일이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이 장학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오게 되어 있는 68명 학생 중에서 14명이 아까 그 2명과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람에 있는 직업훈련소 관계자들은 우리 직고용이라서 이번에 데려왔는데 카불에 있는 직업훈련소가 원래 우리가 만들었지만 아프간 정부에 위탁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올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태용 위원 외교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의 재가동 징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발표됐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태용 위원 제가 귀를 좀 의심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을 못 한 적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 확인 못 합니까?

자세한 정보 사항을 확인 못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실 자체를 확인을 못 하겠다고 지금 외통위에서 외교부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IAEA 측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했었을 그 당시에 IAEA 관계자가 자신들이 강조한 것은 추정하고 징후가 있다는 것이고 기자가 물어보니, ‘이것 팩트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약간 뒤로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있다, 없다의 사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의 원정보는 사실 우리가 획득한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태용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영변 핵시설 중에서 5MW 원자로하고 방사화학 실험실이 재가동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래도 우리 정부가……

○조태용 위원 답을 좀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태용 위원 참 문제네요. 왜냐하면 정보 사항이라서 확인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그것도 공개 보고서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외교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굉장히 저해하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도 있었는데,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된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핵시설 자체의 어느 그게 중단됐냐가 중요합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5MW 원자로, 방사화학 실험실 재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재가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합니다.

○조태용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최 차관님, 판단을 다시 하시는 게 낫겠는데……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플루토늄입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재가동이 되면 핵폭탄의 연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개수가 늘거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렇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일부장관께 좀 물겠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구체적인 확인은 못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와 판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조태용 위원 공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신선 재연결을 발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공유했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변의 핵시설이 3년 동안 가동 징후가 없다가 7월 초부터 재가동이 되고, 방사화학 실험실은 좀 빠릅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중대한 일이라고 외교부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남북 연락선을 재개통할 때 고려를 하셨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제가 아까도 대답드렸지

않습니까? 정치·군사·안보적인 사안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이거대로 가더라도 그 시점에서 우선적 조치로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것으로서 연락선을 복원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달리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두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몇 차례 오갔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조태용 위원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오갔던 것 같은데 마지막 친서가 언제 갔지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이 아니겠습니까?

○조태용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7월 27일까지 오갔다고 돼 있는데, 그 친서에서 7월 하순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7월 초부터 오메가Ⅱ 원자로가 재가동되는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플루토늄을 만들어 내는 방사화학 실험실은 이미 2월 달부터 재가동하는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는데, 친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을 대통령께서 하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조태용 위원 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친서의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다른 기회를 주시지요.

○조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차례 친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글썽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용 위원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리 국민들의 분단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동일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다시 외교부차관한테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위원님.

○조태용 위원 제가 보기에선 외교부가 과거보다도 사실 확인을 안 함으로써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변 핵시설, 영변의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봅시다.

유엔에서 우리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외교부에서 받았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받았습
니다.

○조태용 위원 혹시 서한을 읽어 보실 기회가 있었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서한 읽어 봤습니다.

○조태용 위원 며칠 자로 왔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제가 경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태용 위원 아니, 며칠 자로 왔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가 받은 것은 8월 28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조태용 위원 1분만 더 쓸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토요일 날 새벽 02시에 왔습니다.

○조태용 위원 8월 27일 자로 돼 있어요. 제네바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한테 왔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편으로 보냈을 리는 없고 보고를 했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조태용 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명백하게 편지에 써 있습니다. 유엔의 편지에 '8월 27일 날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또 유엔의 우려에 대해서 알려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라고 돼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는 글썄요…… 위원님, 시간이……

○조태용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받은 다음에?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경과를 제가 분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22시 19분에 주 제네바 대표부의 이메일로 이 서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토요일 0시 22분 본부의 전자문서로 제네바로부터 문서를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 후 상기 전자문서 확인을 내부 보고하고 당일 날 15시 55분에 국회의장실에 전자문서로 저희가 송부를 했습니다.

○조태용 위원 일요일 날은 뭐 하셨어요? 8월 27일이 금요일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8월 27일이 금요일…… 금요일 날 밤에 왔습니다, 22시 19분.

○조태용 위원 토요일 날 그냥 하시고……

제가 추가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금 그냥 바로 해서 한 1분 정도 더 하하지요, 아까 또 1분 드렸으니까.

○조태용 위원 1분 가지고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말씀 주시지요.

○조태용 위원 8월 27일 금요일 날 제네바에서 받았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제네바가 시간이 서울보다 늦게 가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서울은 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것을 받아서 바로 즉각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주말을 그냥 허송세월을 했네요. 그리고 월요일 날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어요,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조태용 위원 월요일 날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오후 3시 55분으로 보고된 걸로……

○조태용 위원 오전에는 뭐 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아마 내부 보고를 했을 겁니다.

○조태용 위원 오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4시 정도 쫓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긴급하게 유엔에서 구체적인 요청을 담은 서한이 왔는데 그것을 금요일 날 받고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때까지 국회에 대한 통보를 아무것도 안 한 겁니

다.

국회에서 이것이 지연된 것은 국회 내의 문제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조태용 위원 저는 외교부가 사흘 동안 지연시킨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주말 상황이 있었습니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태용 위원 주말에는 일 안 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조태용 위원 인정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월요일 오전도 아니고 오후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러니까 주말에 지연됐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만 어떤 의도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딜레이를 시켰다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조태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세한 시간 경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따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 보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조태용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지성호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 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가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사업과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등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 사업을 수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예산은 33억 5300만이고 후자는 7억 500만으로 총 40억 5800만입니다. 유사한 다른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집행이 저조한 것에 비해 두 위탁사업 집행률은 92%에 달합니다.

문제는 총 예산 41억 원 중 운영경비로만 32억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수 사업비는 8억

여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쓰인 내역 면면을 살펴 보니까 8억 3900만 원이 남북 분야별 개발협력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에 4억 2100만 원, 군사당국 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2700만 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운영에 2억 16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순수 사업비 8억 중에서도 협회가 직접 집행한 사업비는 고작 1억 원에 해당됩니다. 외주용역이 대부분이고 협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자원넷 관리와 간담회 및 심포지엄 개최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1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건비 20억, 운영비 10억을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장관님,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비가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분수입입니다. 통일부가 협의회와 위탁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에서 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상비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사업비 비중하고 어떤 균형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문제 의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원협회가 가진 어떤 특수성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HS코드를 관리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등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항상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그럴 텐데, 지난 코로나 정국 속에서 그런 부분들 또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상적인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으면서 아마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성호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이 제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요.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런 점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중에 탈북민 지역협의회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어서 119개 지역협의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들의 설치 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이에 따라 지역내 탈북민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문제는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규정을 어긴 채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사업 중복을 방지해야 할 협의회가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큰 사업들의 예산을 전용했고 실제 40% 예산만 회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통일부는 회의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중복 사업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회의수당 부당 지급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 확인하고 통일부에 지적하니 그때서야 규정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참여를 독려한 통일부지만 정작 탈북민 몇 명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히 통일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부정 수급 문제하고 그다음에 탈북민 구성 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복 문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 사용 목적이 일반사업비로 전환된 것, 전용된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잡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 앞으로 지적하는 지적사항 시정 외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탈북민 위원을 늘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 정말 탈북민 정착을 우선하는 협의회로 운영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런 말씀은 지당 맞는 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한 1~2분 더 쓰고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이광재 예, 1분 더 하시지요.

○지성호 위원 이어서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 대북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지원사업의 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약 4588억여 원입니다. 이 중에 3%에 해당하는 138억이 사용 완료되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의 내부 요인과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인 작용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20회계연도 보조사업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사업 시행 민간단체가 모두 공개 불가로 처리되어 지원 과정과 결과평가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통일부에 이유를 물어보니 민생협력사업 민간단체명은 단체 측의 요청 및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단체명이 공개될 시 활동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의 자율성 존중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혈세 사용의……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재 1분 더 드리세요.

○지성호 위원 민간 자율성 존중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 혈세 사용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북 사업 특성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개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장관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북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대한 비공개 보고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단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저도 점차 이게 공개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형편상 두세 가지는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인도주의 협력이든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든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의 의사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공개를 인정하면 다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단체가 그것을 좀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도 하나 고려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성호 위원 딱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 사업의 재원과 관련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만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모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기심위도 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통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 장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북한 인권단체들 사무감사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최종건 차관님께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격이 급신장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작년에는 세계 10대 강국, 올해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객관적으로 규정을 받는 정도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분

명해졌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K-방역 등등 해서 그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요.

그래서 G7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대접받는 초청자였고 그러합니다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우리 외교 특히 국익을 위한 외교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력한 국제기구를 저희가 유치하는 것, 사무국을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G7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저희가 G7 플러스 3, 4 해서 G11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G7보다 국제적인 규모, 경제 규모로 보게 되면 G20가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전 세계의 한 80%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20는 현재 상설 사무국이 없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 3개 국가들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G7은 좀 한계가 있는 게 G20인 중국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도 있고 합시다만 G20는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경제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2010년에 저희들이 상설 사무국 제안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해서, 그때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의 날로 중요해지는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다시 우리가 적극적인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저희가 DMZ 같은 접경지역에 이런 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나 안보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역점사업으로 해 볼 만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만간에 G20 정상회담이 이태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젠다로 검토해 볼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G20 사무국, 일종의 G20를 국제기구화하게 될 텐데요, 이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저희는

대한민국에 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이 상징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용선 위원 G7 플러스 3, 4 할 때 반대했던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본의 블로킹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백신 때문에 그래도 위드 코로나 종식의 움직임도 일부 있습니다만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 일반은 백신의 공급도 매우 제한이 있고 또한 그들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나 환경도 열악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한번 빠지는 더블 딥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ODA를 통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ODA의 상당 부분을 긴급 의료지원으로 많이 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불용 처리한, 실제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점 협력국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에 지금 상당히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포함한 그런 제3세계에 대한 ODA를 긴급 의료지원이라든지 필요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국조실이 전체적인 결정 소관이라서 외교부가 조금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주무는 사실 외교부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말씀하신 대로 국조실에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몇 가지 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일단은 국제 백신 지원의 주요한 행위자가 코백스 퍼실리티인데 거기에 올해 1억 불, 내년엔 1억 불, 저희가 공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상당히 큰 공여이고요. 또 우리 재외국민들의 백신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건 윤건영 위원께서 질

의하셨듯이 저희 주요 몇 개 국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백신이 저희도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러나 하반기쯤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이용선 위원 아니, 그런데 백신 문제보다도…… 백신은 어차피 선진국 클럽이 해결해야 될 큰 국제적 과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3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같은, 예를 들자면 백신만 갖고 100%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이용선 위원 개인 방역을 포함한 사회적 방역이 더불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지금은 거의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게 보면 한국의 KF-94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같은 경우들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 10배씩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긴급 지원 차원에서 민간이 모아서 물품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만 현금으로 태국 현지에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10배예요. 마스크 하나가 1500원 정도 하고 진단키트가 우리가 4000원 남짓하는 게 4만 원 이상 이런 정도로 거의 한국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같은, 우수성들이 아마 알려져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지 10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태영호 위원님의 추가질의 신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 점심시간도 다 돼서 끝내야 되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지만 외교부차관님께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대북 관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 2개를 중요한 걸로 뽑았는데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예, 위원님.

○태영호 위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외교부의 대응

이 대단히 허접합니다. 아무런 내용…… 이것 한 문장 달랑이에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및 공조, 외교적 노력 경주’.

그런데 저는 외교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을 짚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탈레반이 ‘미국산 무기를 북한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 우리 정부가 지금 탈레반하고 이런 공작을, 사업을 해서 나온 입장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질문을 해서 나온 겁니까, 탈레반의 입장이?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탈레반 측에서 대변인이 몇 차례 우리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데요.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북한에 미국산 무기, 아프가니스탄에 남겨 놓은 미국산 무기를 북한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유관국들이나 탈레반 측하고 협상하는 것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저희는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게다가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왔다고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볼 때 북한이 미국산 무기를 가져갈 수 있는 루트는 육로로는 러시아와 중국이고 배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은 파키스탄밖에 없어요. 몇 개 나라만 우리가 잘 협력 공조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북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북한은 내전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해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행정통치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 현대적인 무기가 있으면 현금을 들고 가서 부패한 관료들을 먹이고 그런 무기들을 저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북한의 주력 전투기, 저게 MIG-29기인데 저것 어디서 가져 왔느냐? 소련 때 북한이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도 소련이 주지 않았어요. 왜? 저것 주면 북한이 남침한다, 한반도 평화 깨진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때 카자흐스탄도 국가가 다시 재건되니까 완전히 무정부상태지요. 그때 가서

완전히 헐값으로 저 MIG-29 전투기를 가져와서 지금 주력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저게 어느 나라산 헬기인지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미국산입니다.

○태영호 위원 아시네요.

보세요. 지금 북한군이 남침해 온다면 그 최전방에서의 주공격 헬기가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산 헬기 수백 대가 북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일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외교부가…… 이거 보세요. 아마 그때 소련이 해체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알고 카자흐스탄에 먼저 다가갔다면 MIG-29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을 수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인 무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왕위 외교부장이 오시잖아요. 저는 왕위 외교부장하고…… 지금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공식 인정했잖아요. 저는 중국한테도 우리가 이것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부패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산 무기, 헬기 이런 걸 중국을 통해서 수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지금 이슈 토의할 것, 이런 것 계획에 잡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프간에 있는 즉 미국이 남겨 놓고 간 군사 자산들은 거의 다 불능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다 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저항군하고 싸우는데 탈레반이 모든 미군 무기를 동원하고 블랙호크 헬기까지 쓰지 않았어요?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유관국들과…… 이런 문제는 전혀 시야에 없네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사전 차단해야 되겠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만큼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들이 큰 격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과의 어떠한 접촉이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북한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경이 험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마 북한 군부나 방산업체 전문가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이 반짝반짝할 겁니다. 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새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혈값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무기 개발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미사일의 원조도 소련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다. 중동전쟁에 북한 비행사들을 애급에 보내 주고 애급에서 미사일 견본을 가져다 역설계했어요.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거나 국가가 해체되거나 또 행정통치력이 마비될 때, 이런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북한의 무기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외교부 현안보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현실성 있는, 우리 안보 상황과 결부해서 좀 내실 있는 대책, 대응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자고 점심시간인데 기다렸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최종건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재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이태규 위원, 김영주 위원, 김영호 위원, 이재정 위원, 김석기 위원, 유기홍 위원, 이용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서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과 김석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은 각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지적과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예산과 관련한 문제, IAEA의 보고서 문제, 종전선언 문제, 재외동포의 백신 문제, 미중 관계에서의 베이징 올림픽과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파이프 아이즈의 한국 대치 문제,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대치 문제, 유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문제 그리고 간토 대지진의 아픈 역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G20의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관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 제일 먼저 아침에 오셨는데 각별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차관님, 배기찬 사무처장님, 최종건 차관님도 장관님을 대신해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장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뒤에 산하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 (9인)	◎이재정 김경협 김영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4)
	정진석 조태용 지성호 태영호	국민의힘(4)
	김홍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 기금심사 (9인)	김영주 유기홍 윤건영 이용선	더불어민주당(5)
	◎김석기 김태호 박진	국민의힘(3)
	이태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 (3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1)
	정진석	국민의힘(1)
	◎이태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8인)

김 경 협	김 기 현	김 석 기	김 영 주
김 영 호	김 홍 걸	박 진	송 영 길
유 기 홍	윤 건 영	이 광 재	이 용 선
이 재 정	이 태 규	정 진 석	조 태 용
지 성 호	태 영 호		

○청가 위원(1인)

이 상 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지 동 하
전 문 위 원	최 용 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 1 차 관	최 중 건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완 중
본 부 대 사	홍 영 기

평화외교기획단장	임	갑	수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손	혁	상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		근
제외동포재단이사장	김	성	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여	운	기
통일부			
장	관	이	인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상	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	인	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강	영	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무 처 장	배	기	찬
기 획 조 정 관	김	점	준
자 문 건 의 국 장	전	일	린
위 원 지 원 국 장	신	성	기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전해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2021. 8. 25.
김태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21. 9. 1.
안민석	유기홍		

○의안 회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2021. 8. 20. 이용선·강득구·강민정·강선우·
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
권인숙·김경만·김두관·김민철·김병주·
김상희·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원이·
김운덕·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희재·
남인순·맹성규·민병덕·민형배·박영순·
박주민·박찬대·백혜련·서삼석·서영교·
서영석·설훈·송갑석·송재호·신정훈·
신현영·심상정·양경숙·양정숙·양향자·
오기형·오영환·위성곤·윤건영·윤영덕·
윤영찬·윤재갑·윤후덕·이병훈·이수진(비)·
이수진·이용빈·이용우·이은주·이태규·
이해식·이형석·임호선·장철민·정필모·
최강욱·최종윤·최혜영·하태경·허영·
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정민·
황운하 의원 발의)

8월 23일 회부됨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2021. 8. 27. 김석기·정진석·지성호·김기현·
태영호·조태용·김태호·박진·金炳旭·

하영제 · 최연숙 · 조수진 · 양금희 · 김영식 ·
배현진 · 서병수 · 이양수 · 황보승희 · 이명수 ·
권명호 · 조명희 · 정희용 · 정경희 · 강대식 ·
구자근 · 성일중 · 최형두 · 백종현 · 안병길 ·
윤두현 · 이종성 · 서정숙 · 서범수 · 이만희 ·
서일준 · 김승수 · 최승재 · 김형동 · 윤주경 ·
김선교 · 이종배 · 김정재 · 김성원 · 배준영 ·
박성민 · 전주혜 · 박대출 · 김미애 의원 발의)

8월 3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윤영덕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
강은미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교홍 ·
김남국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수홍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희재 ·
노웅래 · 도종환 · 류호정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용진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배진교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심상정 ·
안규백 · 안호영 · 양경숙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용혜인 ·
위성곤 · 유기홍 · 유정주 · 윤건영 · 윤미향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후덕 · 이규민 ·
이동주 · 이명수 · 이병훈 · 이성만 ·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정문 ·
이탄희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장경태 · 전용기 · 정성호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조정훈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최기상 · 최종윤 · 한준호 ·
허영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의원 발의)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통지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 사임 통지

2021. 8. 31. 국회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사임
의 건이 동의되었음이 의장으로부터 통지됨

○보고서 송부

2020년도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2021. 8. 27. 정부 제출)

8월 30일 송부됨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2021년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

(이상 2건 2021. 8.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2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1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문 등
(3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
자료로 송부됨